

### 3차시 [학교폭력 분쟁조정 절차]

#### <학습목표>

학교폭력 사건의 분쟁조정의 필요성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분쟁조정 신청권자와 분쟁조정절차 및 분쟁조정의 거부와 중지 및 자치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 <학습내용>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피해학생측과 가해학생측간의 신속한 분쟁해결의 필요성과 중재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분쟁조정절차 및 신청과 기간, 분쟁조정거부 및 중지사유 및 자치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및 분쟁조정이 성립한 경우와 성립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에 대해서 알아본다.

#### 1. 학교폭력사건으로 인한 분쟁의 신속한 해결의 필요성

가. 학습권 보장의 문제 : 학교의 장은 성적 등을 평가함에 있어서 피해학생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법 제16조 제4항). 보호조치는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성적 평가 등에서 불이익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해야 함은 물론, 일시 보호조치를 위한 요양의 조치 등으로 인하여 피해학생이 장·단기간 결석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성적평가를 위한 시험에 응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학교학업 성적관리 규정에 의거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나. 피해학생 및 학부모나 가해학생 및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가중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경우 현실적으로 치료비 등이 필요하며, 피해학생이 “치료를 위한 요양” 조치에 대해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해야 한다.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이를 부담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 관한법률 법률 제 15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성권을 행사하므로(법 제16조 5항) 가해학생가해학생의 보호자로부터 일정금액을 받을 수는 있으나 가해학생 보호자가 자발적으로 지급하는 것보다는 시일이 더 걸리게 된다. 따라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면 피해학생의 치료·요양에 필요한 비용도 신속히 받을 수 있게 된다.

다. 불안한 지위에서의 조기해방

학교폭력 가해자 및 보호자의 입장에서는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한 형사처벌의 위협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고 불법행위 책임의 소멸시효 기간 내에서는 여전히 손해배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고 가해학생의 보호자는 하·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하는 불안한 지위에 놓여 있으므로 손해배상소송에서도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학교폭력가해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조치와 별도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남아 있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할 경우에는 함께 교육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민사상 책임, 형사상 책임 또는 징계책임에서 조기에 해방되는 것이 가해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민·형사상 소송제기 등의 불안정한 지위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 정신적 손해(위자료) 산정을 위한 정신감정의 어려움

민사재판과정에서 피해학생의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신체감정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1개월 정도 폐쇄 병동에 갇혀 치료하던 약물도 중지해야 하며, 책도 볼 수 없고 가족조차 면회가 안 되는 상황에서 피해학생의 부모들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를 위해 자기 자식을 이런 고통 속에 다시 몰아넣어야 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하는 또 다른 고통에 직면하는 경우가 있다.

마. 피해학생 보호자와 가해학생 보호자의 감정 대립의 격화

피해학생의 보호자의 입장에서는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찾아와서 사과하거나 치료비 등을 지급하겠다고 먼저 이야기를 하지도 않고 가해학생을 두둔하면서 피해학생 보호자가 학교폭력을 기화로 손해배상금을 단단히 한 몫 챙기려고 한다고 생각하고 주위 여론을 환기시키고 있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가해 학생의 보호자의 입장에서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아이들끼리 사소한 문제로 학교폭력으로까지 번졌는데 원만히 해결하려고 하기 보다는 바로 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진단서를 발급받고 가해 학생을 찾아가 음박지르고 학교를 찾아가 피해상황을 부풀리고 있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이렇게 피해학생 보호자와 가해학생 보호자가 사건 초기부터 서로 감정적 대립을 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3자의 중재나 조정에 의하여 사건해결의 실마리를 풀어나간다면 지루한 법정 공방과 형사처벌까지 가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도 조기에 소송절차에서 해방

시킬 수 있을 것이다.

#### 바. 교사 및 학교운영자의 민사상·국가배상법상 책임문제

교사 등의 보호감독의무자는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서 발생하고, 당해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기도 한다. 민·형사상 책임이 없다고 하더라도 도의적 책임 등을 언급하는 여론 등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은 경우가 많을 것이며, 학생들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생활지도를 하거나 훈계를 하는 데도 주저하게 되는 경우도 있게 된다.

## 2. 학교폭력 분쟁조정의 제도적 의의

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즉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조정과 분쟁조정’ 및 ‘그 밖에 자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분쟁조정을 할 수 있다.

분쟁조정이란 소송에 대한 대체적 분쟁해결수단으로서, 중립적인 제3자의 주선하에 분쟁당사자간의 자율적인 타협과정을 통해 화해에 이르는 제도를 말한다. 분쟁조정은 소송과 비교하여 절차의 진행이 신속하고 간단하여 시간적으로나 금전적으로 경제적이고, 절차가 비공개로 진행되는 장점이 있다.

#### 나. 중재제도

중재(Arbitration)란 분쟁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사법(私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현존 또는 장래에 발생 할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인인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하여 중재인의 판정에 맡기는 동시에 그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자주 법정제도이다.

#### 다. 장점

분쟁의 신속하고 경제적인 해결을 도모함으로써 일도양단적인 판정보다는 당사자간 감정대립을 남기지 않는 장점이 있다.

#### 라. 중재절차에 의해 성립된 화해제약의 효력 및 집행력 확보 방법

중재절차에서 화해계약이 성립하면 ‘사법상 합의’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 경우 합의내용은 공정증서를 이용하면 집행력을 부여받을 수 있다.

마. 중재제도 활성화를 위해 개선해야할 사항

(1) 현재 법정기구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뿐만 아니라 분쟁해결도 담당하는 기능이 있다.

객관적이고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법률전문가, 의료전문가, 심리치료전문가 등이 자치위원으로 참여하여 법적, 의료적, 학생의 학교폭력 후유증, 가해 학생의 심리치료 등에 전문적 의견을 제시하면서 문제해결을 주도한다면 모든 학교에서 학교 폭력으로 인한 분쟁을 초기에 해결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이를 위해서는 ① 객관적이고 공정한 전문가가 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② 학교측은 학교폭력사건을 숨기지 말고 자치위원회를 통한 분쟁해결 의지를 가져야 할 것이며, ③ 피해자 및 가해자에게 자치위원회를 통한 분쟁해결 방법 및 절차의 장단점을 설명 하는 절차가 필요하고, ④ 합의내용은 법적으로 강제될 수 있는 방법 모색 및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며, ⑤ 분쟁해결 시 민·형사상 이의제기 금지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며, ⑥ 분쟁해결 후 피해자 및 가해자를 치료 및 교육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기관과 연계시켜야 하며, ⑦ 자치위원회에서 합의 후 일정 기간동안은 합의 사항을 이행 하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 3. 분쟁조정 절차

학교폭력에 대한 분쟁조정은 “분쟁당사자의 신청 → 분쟁조정 개시 → 분쟁조정 일시 및 장소 통보 → 분쟁조정 → 분쟁조정 종료 → 분쟁조정 결과처리” 순으로 그 절차가 진행된다.

### 4.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

가.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자치위원회의 조치에 대해 불만을 가지는 경우 즉, 피해학생 측에서 자치위원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또 다른 처벌이나 징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나.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나 가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를

하고자 할 때 즉, 피해학생 측에서 치료비와 요양비 등 금전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경우 및 가해학생 측에서 피해학생 측의 치료비 및 요양비에 대해 합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5. 분쟁조정의 신청권자

분쟁당사자(피해·가해측)만이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는 분쟁조정신청서(분쟁조정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보호자의 성명 및 주소, 분쟁조정 신청의 사유를 기재함)를 작성 하여 자치위원회나 교육감에게 신청한다. 분쟁조정은 당사자의 서면신청 없이는 개시될 수 없다. 학교폭력 사건의 신고 또는 통보를 받은 경우 학교나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 이나 보호자에게 사건에 관한 통보와 함께 자치위원회의 분쟁조정제도에 대해서 안내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며, 분쟁당사자가 구두로 분쟁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분쟁조정신청서의 작성을 안내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 6. 분쟁조정의 기한

가. 분쟁조정 개시일

(1) 학교폭력 발생 후, 분쟁 당사자가 조정을 신청할 경우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시작하여야 한다.

(2)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당사자에게 분쟁조정의 일시 및 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3) 통지를 받은 분쟁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불가피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에게 분쟁조정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조정의 기일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분쟁당사자가 분쟁조정의 연기를 신청하였으나 자치위원회의 판단결과 불가피한 사유로 연기를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분쟁조정기일을 다시 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④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자치위원회 위원 또는 지역위원회 위원 중에서 분쟁조정 담당자를 지정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분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자문 등을 할 수 있다.

나. 분쟁조정 기간

분쟁의 조정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한다. 1개월이란 기간의 계산에 관해서는 개별법률 등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기간계산에 관한 일반규정인 민법이 적용되며(민법 제155조), 민법에 따르면 주(週), 월(月), 또는 년(年)의 처음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년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前日)로 기간이 만료한다(제160조 제2항). 1개월 이내 (또는 1개월을 넘지 못한다)라는 의미는 예를 들어 9월 5일 분쟁조정을 개시하였다면 10월 4일까지(10월 4일을 넘기지 못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다.

## 7. 분쟁조정의 관할권

가. 피해·가해학생이 같은 학교일 경우에는 해당학교 자치위원회에서 분쟁조정을 한다.

나. 피해·가해학생이 다른 학교일 경우에는 (1)동일한 시도 관할 구역일 경우에는 해당 시도 교육감이 분쟁조정을 하고, (2) 관할구역이 다른 시도일 경우에는 각 지역의 교육감 간에 협의를 거쳐 분쟁조정을 한다.

## 8. 분쟁조정의 거부 · 중지

가. 분쟁조정의 거부 · 중지 사유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① 분쟁당사자의 일방이 분쟁조정을 거부한 경우 ②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분쟁당사자가 고소 · 고발을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이미 개시된 분쟁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를 표명한 경우 뿐 아니라, 정당한 사유없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분쟁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분쟁조정의 거부 · 중지의 통보

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중지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쟁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분쟁조정의 거부 · 중지 사유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분쟁조정 시작을 거부하거나 중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의 판단에 따라 분쟁조정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 즉, 당사자의 일방이 분쟁조정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명했거나 또는 민 · 형사의 법적절차를 시작한 경우라도 자치위원회는 합의를 하는 것이 법적 절차에 따라 해결하는 것보다 서로에게 더

유리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조정에 응하도록 권유할 수 있다.

다만, 피해학생 측이 완강히 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차후의 학교생활 등을 언급해가며 합의를 강요해서는 안 되고 가해학생 학부모에게 “합의를 하면 교육적인 관점에서 최대한 관대하게 처리해 주겠다”, 혹은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본 후에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을 하겠다”는 식으로 징계조치를 담보로 합의를 강요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한편, 분쟁조정 신청 내용 중에 명백한 허위사실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신청 내용의 중요부분이 사실이고 그 부분에 관해 분쟁 당사자들이 조정을 원하는 경우라면 조정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 분쟁조정에 당사자가 참석을 하겠다고 하였다가 나중에 마음을 바꿔 자치위원회가 참석을 요청하였지만 한쪽 당사자가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가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단순히 일정상 참여할 수 없어 참여를 거부한 경우라면 일정을 연기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처음에 참석하겠다고 마음을 바꿔 분쟁조정자체를 거부하는 경우라면 분쟁조정을 개시하는 것을 중단하거나 진행되던 분쟁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

## 9. 분쟁조정을 위한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조사

가. 자치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 나. 조사권한

조사권한은 자치위원회에 있으나 사실상 직접적인 조사는 자치위원회의 지시 하에 학교폭력 전담기구 소속교사 즉, 책임교사, 보건교사, 상담교사가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자치위원회 위원 또는 지역위원회 위원 중에서 분쟁조정 담당자를 지정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분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자문 등을 할 수 있다.

### 다.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조사

학교폭력 전담기구 소속교사들이 학교폭력 사안의 진상을 파악하고, 의료기관, 청소년상담기관, 수사기관 등의 협조를 얻어 분쟁당사자의 주장내용을 확인한다.

### 라. 조사 결과의 보고

학교폭력 전담기구 소속 교사들은 조사된 내용을 정리하여 자치위원회에 보고한다.

## 10. 분쟁조정이 성립한 경우의 결과처리

### 가. 합의서 작성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조정이 성립되면 (1) 분쟁당사자의 주소와 성명, (2) 조정대상 분쟁의 내용[① 분쟁의 경위, ②조정의 쟁점(분쟁당사자의 의견을 기술한다), ③조정의 결과]를 기재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자치위원회는 분쟁당사자에게, 교육감은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 소속 학교 자치위원회와 분쟁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 나. 합의서의 필수적 기재사항

(1) 분쟁당사자의 주소와 성명, (2) 조정대상 분쟁의 내용, (3) 조정의 결과, (4) 합의서에는 자치위원회가 조정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와 조정에 참가한 위원이, 교육감이 조정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와 교육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다. 임의적 기재사항

(1) 치료비 지급시 구체적인 지급방법과 절차, (2) 학교 자체적으로 분쟁조정결과가 이행되는 지 확인 전화나 요청, (3)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에 별도 화해 기회 제공 등을 기재할 수 있다.

### 라. 교육감에게 보고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조정의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1. 분쟁조정의 이행강제의 문제

분쟁조정을 통하여 당사자들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다 하여도 이는 화해계약이 성립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강제집행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당사자 일방이 합의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이행을 강제하는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자치위원회가 나서서 이행을 강제하는 방법은 없다.

그러나 합의금에 대해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집행공증하는 경우에는 약속어음의 만기로부터 3년내에는 별도의 판결문 없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 12. 분쟁조정의 종료

### 가. 분쟁조정의 종료 사유

(1) 분쟁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이 제시한 조정안을 분쟁당사자가 수락하는 등 분쟁조정이 성립한 경우 (2) 분쟁조정 개시일로부터 1개월을 경과하도록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을 종료하여야 한다.

### 나. 분쟁조정 종료의 통보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하거나 분쟁조정을 종료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쟁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 13. 자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 가. 제척사유

자치위원회의 위원은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분쟁조정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인 경우 또는 보호자였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분쟁조정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해당 분쟁조정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과 관련이 있다고 자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사건에서 제척된다.

### 나. 기피신청

(1)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당사자는 자치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자치위원회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2) 자치위원회는 기피신청을 받으면 의결로써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다. 회피

자치위원회의 위원이 제척 또는 기피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분쟁조정 사건을 회피할 수 있다.

#### 14.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 법적 절차의 안내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이 분쟁조정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한 경우 또는 분쟁조정 개시일부터 1개월을 경과하도록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하여 분쟁조정이 종료된 경우(예컨대 과도한 피해보상을 요구하여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피해·가해학생의 보호자에게 각각의 사유를 통보하는 것 이외에도 차후의 가능한 법적인 절차를 안내해 줄 수 있다.

#### 정리하기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① 분쟁당사자의 일방이 분쟁조정을 거부한 경우 ②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분쟁당사자가 고소·고발을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이미 개시된 분쟁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 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중지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쟁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분쟁조정의 거부·중지 사유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분쟁조정 시작을 거부하거나 중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의 판단에 따라 분쟁조정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분쟁조정을 통하여 당사자들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하여도 이는 화해계약이 성립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강제집행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당사자 일방이 합의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이행을 강제하는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자치위원회가 나서서 이행을 강제하는 방법은 없다. 그러나 합의금에 대해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집행공증하는 경우에는 약속어음의 만기로부터 3년내에는 별도의 판결문 없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분쟁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이 제시한 조정안을 분쟁당사자가 수락하는 등 분쟁조정이 성립한 경우, 분쟁조정 개시일로부터 1개월을 경과하도록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을 종료하여야 한다.

#### 평가하기

##### 문제1.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분쟁조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자치위원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또 다른 처분이나 징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

(2)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나 가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자치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3) 학교폭력 발생 후, 분쟁 당사자가 조정을 신청할 경우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시작하여야 한다.

(4)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당사자에게 분쟁조정 의 일시 및 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5) 통지를 받은 분쟁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불가피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에게 분쟁조정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조정의 기일을 반드시 다시 정하여야 한다.

**정답 : (5)**

통지를 받은 분쟁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불가피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에게 분쟁조정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분쟁조정의 기일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분쟁당사자가 분쟁조정의 연기를 신청하였으나 자치위원회의 판단결과 불가피한 사유로 연기를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분쟁조정기일을 다시 정하지 않을 수 있다.

**문제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분쟁조정 기간 및 관할권 등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자치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자치위원회 위원 또는 지역위원회 위원 중에서 분쟁조정 담당자를 지정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분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자문 등을 할 수 있다.

(2) 분쟁의 조정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한다.

(3) 피해·가해학생이 같은 학교일 경우에는 해당학교 자치위원회에서 분쟁조정을 한다.

(4) 피해·가해학생이 다른 학교일 경우에 동일한 시·도 관할 구역일 경우에는 해당 시·도 교육감이 분쟁조정을 한다.

(5) 피해·가해학생이 다른 학교일 경우에 관할구역이 다른 시·도일 경우에는 피해학생이 소속한 지역의 교육감이 분쟁조정을 한다.

**정답 : (5)**

피해·가해학생이 다른 학교일 경우에 관할구역이 다른 시·도일 경우에는 각 지역의 교육감 간에 협의를 거쳐 분쟁조정을 한다.

**문제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1) 자치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분쟁조정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인 경우 또는 보호자였던 경우 제척사유가 된다.
- (2) 자치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이 해당 분쟁조정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제척사유가 된다.
- (3)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당사자는 자치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자치위원회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4) 자치위원회는 기피신청을 받으면 의결로써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이 된 위원도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있다.
- (5) 자치위원회의 위원이 제척 또는 기피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분쟁조정 사건을 회피할 수 있다.

**정답 : (4)**

자치위원회는 기피신청을 받으면 의결로써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